

# 죽어서도 쓸쓸... 끊이지않는 무연고 사망

### 광주·전남 5년동안 264명...5명 중 1명은 시신 인수 포기 고독사도 8803명...가족 단절·경제 양극화에 외로운 죽음

지난 6월 13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김모(54)씨가 뇌출혈로 숨졌다. 김씨는 20년 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은 뒤 홀로 지내왔다. 광주광역시경찰과 동구는 숨진 김씨의 유가족을 수소문해 자녀를 찾아냈지만, 헛수고였다. 자녀들이 시신인수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김씨의 시신을 인수할 또 다른 유족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실패했다. 동구는 결국 사망한 지 17일 만인 같은 달 30일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인의 장례를 유족을 대신해 치러줬다.

숨진 김씨의 사례처럼 가족들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해 홀로 세상을 떠나는 무연고 사망자가 광주·전남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양극화에 따라 가족이 해체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쓸쓸한 현

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나홀로 사는 노인 등이 해마다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례식 없이 세상과 마지막 이별하는 쓸쓸한 죽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 제도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2013~올해 6월 30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전남 무연고 사망자 264명 중 연고자 시신인수포기자 수는 전체의 21.21%인 56명으로 확인됐다.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 이상은 가족의 눈물 한 방울 담긴 배웅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수사기관의 사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하는 번사와 달리, 사고나 병으로 홀로 숨진 사람은 관할 경찰서와 동(洞)주민센터 등에서 신원을 파악해 친족 등 연고자를 찾는 과정을 거친다.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검 인수를 포기하면 무연고자가 된다. 무연고 주검은 관련법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장례를 치른다.

각 구는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면서 시신 인수→염수→수→운구→화장·봉안 등을 거치는데, 병원측에 한 구당 75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시신인수 포기자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경제적 양극화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시신인수 포기자 유족 대다수는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다수”라면서 “(고인과) 수십 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경제적 형편마저 어렵다 보니, 유족이 시신 인수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장례식장의 장례비용은 3일 장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이며, 지난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표준장례비용은 1013만원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홀로 사는 노인 인구 증가와 가족 간의 유대 약화도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고독사는 광주 2326명·전남 6477명 등 모두 8803명에 이른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예전에는 출생 신고가 안 돼 있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무연고자는 대부분이 시신을 포기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며 “가족은 있는데 혼자 사는 1인 노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우울증 20대 남성 2명 동반자살 시도

### 1명 사망·1명 의식불명

광주 한 모텔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2시 15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모텔 객실에서 A(22)씨와 B(25)씨 등 투숙객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숨지고 의식을 잃은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지만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등이 발견된 모텔 방안에서는 연탄불을 피운 흔적과 타다 남은 연

탄, 번개탄, 수면제 등이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지만 사고 발생 전 A씨와 B씨는 “빨리 집으로 돌아와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군복무 도중 머리를 심하게 다쳐 올해 의가사제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자신이 군복무 전 다녔던 대학교의 복학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만나게 된 방법 등을 파악하는 한편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 장애인단체, 염전노예 사건 국가 배상 판결 반발 항소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 8명 중 1명에게만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법원의 1심 민사 판결에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단체 등 29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가 장애인 학대를 방조해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했는데 법원은 여전히 낮은 인권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대책위는 “국가가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전말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하지 않고 마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벼운 문제처럼 손 놓고 지켜보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

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과 다른 법원의 1심 민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달 8일 강모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 이 국가와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박모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 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포함해 국가가 지급할 금액은 총 3700여만원이다. 다른 피해자들의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원행위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표기자 lucky@

## 전자발찌 차고 또 범죄

### 재범률 5년새 3배 늘어

성폭력 전력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발찌)를 착용한 자의 재범률이 지난 5년 사이에 3배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

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는 2012년 23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38건의 재범이 발생했다. 지난 5년 반 동안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277건 가운데 97.5%인 270건이 성폭력 사건이었다. /연합뉴스

## 오리 운반 트럭 추돌사고...쏟아져나온 오리 잡느라 한바탕 소동



○남해안 고속도로 영암지점에서 오리 운반 트럭이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오리 수십마리가 도로 위로 쏟아져 날아다니는 등 한바탕 소동.

○17일 영암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28분께 영암군 학산면 남해안 고속도로 목포~장흥구간에서 오리를 실은 트럭이 앞서가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나 적재함 내 오리운반용 철창이

쓰러지면서 일부 오리가 반대편 차선으로 탈출하거나, 수십 마리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폐사했다는 것.

○새벽 시간이라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어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은 “2차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 고속도로를 위를 날아다니는 오리를 잡느라 진땀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영남=전봉헌기자 jbh@kwangju.co.kr

##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은 공권력 남용” 전 서울경찰청장 등 4명 과실치사 기소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무혐의 유족 “이해 안돼” 재고발 고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백씨 유족이 지난 2015년 11월 18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700일째 되는 날, 사건발생 23개월여만에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다.

검찰이 시위진압 때 시민의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아닌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백씨 유족 등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를 적용한 점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재고발 등을 고민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씨를 직사 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장 신 총경은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임

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비 대책 문건에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가 구은수 전 서울청장으로 명시된 점, 무전 상황 등에 당시 서울청장의 지시 등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해 구 전 청장에까지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살수 요원이던 경장들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씨의 사망은 진로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규정했다.

다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 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할 구체적인 직사 살수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한·최 경장은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살수차 운용 지침과 달리 백씨의 머리에 분당회전수(rpm) 2800 가량의 고압으로 13초 정도 직사 살수를 하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정도 직사 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살수차 ‘총남9호’는 살수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조이스틱과 수압을 3000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어하는 장치도 고장 나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한 경장에게 살수차 고장 사실을 숨기고 안전 검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별도로 적용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마지막 모의고사 ‘집중’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17일 광주시 북구 광주 제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있다. 수능을 앞둔 마지막 모의고사인 이번 시험에는 전국 1835개 학교에서 48만명의 고교 3학년 학생이 응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